

#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리뷰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이사

jcyeo@kdra.or.kr

## 서론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수 의약품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을 말한다.

제약산업은 과학기반 산업(Science-Based Industry)으로서 기초과학 연구 결과가 곧바로 상업적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가 바로 산업경쟁력이기도 한 초 고부가가치 대량생산 장치산업 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이사
- 현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 전 국무총리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약업발전 전문위원
- 전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자금 심의위원
- 전 한국마케팅과학회 부회장
- 선별등재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관련 주체자의 인식 및 태도 분석 연구

따라서 의약품의 허가제조유통 등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확보, 약가 규제, 지적재산권 보장 등 경제·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보건의정책수립에 따른 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영국 통상산업부(DTI)의 글로벌 R&D 투자기업보고서에 의하면 제약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과 함께 R&D 투자비의 70%를 점유하는 5대 업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과 함께 R&D 투자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양대 업종으로 손꼽히고 있다. Burril & Co., IMS HEALTH 시장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미래 세계 의약품시장은 2007년도 6,900억달러와 대비하여 2,020년에는 중국과 인도의 시장의 급격한 신장세에 힘입어서 약 2배 정도인 1.3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신약 연구개발은 글로벌 시장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등 10여개 선진 국가들이 강력한 국가 과학기술 지원 정책 아래에서 주도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중인 주요 글로벌신약 또한 이들 국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주요 판매 글로벌신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상위 20개 다국적제약기업이 개발 중인 글로벌신약의 파이프라인 30%를 보유하고 있다. Data monitor의 시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으로 세계 상위 20대 다국적제약회사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의약품 종류는 저분자합성의약품으로서 2012년 판매액 전망 비중은 75.7%로서 기업경영 성장엔진의 핵심으로 되어 있다.

<표 1> 2006 - 2012년 의약품 종류별 판매액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의약품 종류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CAGR (%) | 비중 (%) |
|-------------------------------|---------|---------|---------|---------|---------|---------|---------|----------|--------|
| 저분자합성의약품 (Small molecule)     | 354,073 | 368,514 | 379,049 | 391,113 | 403,735 | 408,978 | 367,135 | 0.6      | 75.7   |
| 치료용 단백질 (Therapeutic protein) | 47,781  | 51,679  | 54,793  | 58,065  | 60,374  | 62,548  | 64,495  | 5.1      | 13.3   |
| 단일클론 항체 (Monoclonal antibody) | 19,573  | 24,767  | 29,185  | 33,531  | 37,496  | 40,820  | 43,381  | 14.2     | 9.0    |
| 백신 (Vaccine)                  | 3,398   | 4,849   | 6,416   | 7,906   | 9,239   | 10,313  | 9,711   | 19.1     | 2.0    |
| 합 계                           | 424,824 | 449,809 | 469,444 | 490,615 | 510,845 | 522,659 | 484,721 | 2.2      | 100    |

출처 : Data monitor, "Monoclonal Antibodies Report Part I", 2007

주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우리나라는 1986년 신약연구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신약연구개발의 국내외 마라톤코스를 완주하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10년 밖에 안 되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수출 건수를 살펴 볼 때 19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80년대 말부터 2007년도까지 해외 14개국을 대상으로 총 40건이 성사되었다. 이를 연대별로 분류해 보면 1980년대에 1건으로서 연평균 0.1건이, 1990년대에 11건으로서 연평균 1.1건이, 2000 - 2007년에 28건으로서 연평균 3.5건이 성사 되는 등 매년 기술수출 건수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기술무역수지 측면에서는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07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01 - 2006년 까지 총 기술도입액이 1억 6,305만 달러, 총 기술수출액이 2억 6,785만 달러로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 개발된 15개의 국산신약 중에서 시장성 높은 주요 국산신약은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 한지 오래되었고, 예상 매출액의 증감률은 괄목할 만 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1일 증권 선물거래소의 12월 결산 상장 제조사 2008년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의 업종별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체 연구개발비 비율은 3.09%, 전기전자는 7.18%, 의약품은 그 뒤를 이어서 6.34%였다. 이를 통해서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을 통해서 전형적인 제조업에서 탈피 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경영변신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본론

지금 글로벌 제약시장은 고속성장과 더불어 혁신신약개발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블록 버스터 신약의 특허만료로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 제약시장의 점유율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계의 신약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러한 글로벌 신약개발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정적인 국산신약개발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블록버스터 급 신약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다국적제약회사가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신약개발전략의 파도를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 하면서 타고 넘어야 한다. 다국적제약회사는 우수한 개량신약의 개발에 힘쓰고 있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치료제분야에 연구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신약 후보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테크기업과의 제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사 신약 이 나오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HHS, 조합화학, 게놈해석, 프로테오 미학, X선 구조해석, 유효성 및 부작용 예측기술 등 많은 기술혁신이 일어남으로서 많은 바이오테크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바이오테크기업이 탐색연구를 하고 다국적제약회사가 개발과 판매를 하는 수직적인 신약개발의 분업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임상단계의 말기 기

술이전이 줄어든 반면에 개발 위험부담은 높지만 신약개발 전임상 단계의 초기 기술이전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한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다국적제약회사들의 대규모 기업합병은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미 바이오테크기업과의 수직적인 신약개발의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크리티컬매스(critical mass)를 획득한 다국적제약회사들은 바이오테크기업을 매수하는 소규모 기업합병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 규모와 신약개발 수준으로 볼 때는 글로벌 바이오테크기업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국내 제약기업들의 실상이다. 그러나 글로벌 신약개발시장의 급물살에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명실상부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다.

신약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마케팅의 현실적인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신약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체제의 신약개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산학연관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제약산업의 육성은 신약개발 지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부의 '2003 ~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경제 진입 도약기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약연구개발은 그 중요도와 고속 성장세에 비해서 미래 전략적 국가 투자방향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미래 경제사회 니즈와 과학 기술분야의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방향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우수 의약품 개발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것이 신약개발이지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지원 할 22개 신 성장 동력 범주 안에 신약개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이 바이오제약(자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도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약연구개발을 기업 성장 동력의 미션으로 삼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비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영 행로가 확연하게 구분되면서 다수의 신약 개발 및 개량신약 개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제약산업육성법의 제정과 신약개발 관련법의 재정비를 통해서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제약산업계의 혁신형제약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신약개발관련 법령은 생명공학육성법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보건의료

기술진흥법등이 있으나 이들 법령들이 각각 정의하고 있는 영역 및 이에 따른 육성 범위가 신약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개발 지원을 통해서 국내 제약산업이 영세성을 극복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발전기금, 성공불용자제도등의 안정적인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약산업육성 이라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둘째, 국내 대다수 혁신형 제약기업이 저분자 신약개발과 개량신약에 집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의 신약개발 예산지원은 이러한 시장수요 확대에 근간을 둔 정책수립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 R&D 임계규모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1987년부터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신약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해 왔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은 주로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되었다. 1987년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촉진법)을 시작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보건의료기술진흥법), 지식경제부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공동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발전법) 등 각 부처 별 고유 출연사업 중 일부 지원사업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제약기업의 신약개발활동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는 주요 제약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1년간 제약기업수행 신약개발 주요과제에 총 1,330여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연간 63억4천여만원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약기업이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할 경우 의약품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정부지원액 규모는 1993년 131억 원으로 시작하여 2001년도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평균 81.8%씩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965억원, 2005년도에는 1,4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7%인 약 1,000억원은 대학과 연구기관에 의해서 집행되었고, 나머지 23%인 약 497억원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었다. 한편, 신약개발이 바이오테크(BT) 응용 분야 중에서 8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의 생명공학육성정책에 따른 막대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 동안 한자리수를 기록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생명공학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하여 8개 부처에 이르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 이외의 나머지 부처들은 주로 신약개발의 기초분야 또는 시설, 인프라 지원분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계의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효과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셋째, 제약산업과 신약개발 지원정책은 보건의료 중심 부처에서 주도하고 협력부처의 동

반자적인 역할 분담이 뒤따라야 한다. 보건의료 선진국인 미국, 일본을 살펴보면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와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을 중심으로 전개함으로써 제약산업을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기반 조성 및 전주기적인 신약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2005 - 2007년도 기준으로 국가 R&D 예산의 21.2%를 보건(Health)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순위 1위로서 57.3%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 분야 전체 예산의 82.6%를 보건복지부 및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이, 제약을 포함한 의료분야의 경우에는 총 예산의 90.6%를 보건복지부 및 국립보건원에서 집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6 - 2007년도 기준으로 보건 분야 총 예산 가운데 49.7%를 후생노동성에서, 26.0%를 문부과학성에서, 8.3%를 경제산업성에서 집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경제·산업, 교육·과학 중심 부처가 아닌 보건·의료 중심부처에서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계획수립 및 집행을 전담하고 있는 이유는 제약산업이 그 특성상 산업으로서의 성격과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은 연구개발·제조·허가·판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고, 정부 관여정도에 따라 산업 혁신성 제고와 신약개발 진흥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신약개발 선진국들은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도 제약산업 육성 및 국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재 투자비만큼은 약가관리제도에 충분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 우대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준 향상과 비용-효과적인 자원 배분 차원에서 신약개발이 갖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충분하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유인을 위한 강력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제약산업계는 갈수록 증가되는 정부의 약가인하 압력, 열악한 수익구조와 중국, 인도, 남미 등지의 제약사들의 저가시장공략, 한미FTA, 한-EU FTA 등 대내외적 각종 도전요소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신약, 개량신약 등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순이익의 77%를 R&D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 기업들에게 더 이상의 투자금액 상충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마저 사라질 경우 투자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혁신속도는 지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제지원혜택을 부

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액공제는 기업이 신규의 R&D투자를 유도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높다(Bloom-Griffith-Klemm, 2001).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조항을 영구화 시키고 투자액의 100%이상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투자액의 20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제약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R&D관련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 조항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조항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정부 및 국회는 하루속히 일몰조항을 영구조항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기존의 실효성이 부족한 세제 지원사항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세제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계별로 세제개편을 통한 강력한 조세감면을 시행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 2013년 까지 주요 국가별로 시행중인 조세지원제도 중 최고치를 도입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13년 이후에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세지원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적인 제약산업 및 신약개발 지원정책수립 기준의 현실적인 변화가 요망 된다. 미국정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투자 및 정책 계획에 따라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자국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적별 R&D예산의 증감을 살펴보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는 감소한데 비해서 개발연구는 증가하고 있다.

〈표 2〉 OECD 주요 국가별 R&D 조세지원(세액 공제)

| 국가   | 당기 투자(A) | 증가 투자(B) | 중소기업 특례 | 비고                            |
|------|----------|----------|---------|-------------------------------|
| 캐나다  | 20%      |          | 35%     |                               |
| 프랑스  | 30%      |          |         | 1억유로 초과시 5%                   |
| 포르투갈 | 20%      | 50%      |         | A+B (합산)                      |
| 스페인  | 30%      | 50%      |         | A+B (합산)                      |
| 일본   | 8~10%    |          | 12%     | 매출액 대비 R&D 비율 기반              |
| 멕시코  | 30%      |          |         |                               |
| 네덜란드 | 14%      |          | 42%     | 연구인력 인건비에 한함                  |
| 노르웨이 | 18%      |          |         |                               |
| 미국   |          | 20%      |         | 증가투자 및 당기 투자금 50%중 적은 금액의 20% |
| 아일랜드 |          | 20%      |         |                               |

자료 : OECD, tax treatment of business investment (2008)

신약개발 분야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상업화 예측이 불투명한 연구결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를 미션으로 한 개발전략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면서 제약산업 및 바이오기술분야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2025년까지 미국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대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와해성 기술이란 기술분야별로 국가의 지정학적, 경제학적, 군사적,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과급 효과 및 향후 발전 과정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학교나 연구소의 원천기술개발이나 기초기술 개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간 개발 기술로서 선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열린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와해성 기술을 도출하고 생산적인 정책 환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글로벌 네트워크 아웃소싱의 일환인 C&D(Connect & Development)로 신약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향상 시켜 나가야 한다. Stanford C. Bernstein & Co 자료에 따르면 당분간 블록버스터 신약의 의존도가 높은 다국적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거대품목의 특허만료에 따른 대체품목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다국적제약기업의 유망 신약후보물질 선점을 통한 연구기간 단축 및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등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글로벌 신약연구개발 분업 구조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국적제약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20%를 신약개발 후발국의 제약기업과 우리나라 대 제약기업 급의 바이오테크기업, 산업화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과의 제휴에 사용하고 있다. 1963 - 1999년 FDA승인 신약의 38%가 제휴를 통한 라이선싱에 의해 이루어졌고, 2002년 1년 동안에 바이오테크기업 간 304건, 다국적제약회사와 바이오테크기업 간 217건, 다국적제약회사 간 67건의 제휴가 성립되었다. 2003년 세계 매출 50대 약품 중 17개(매출액 기준 35%)가 라이선싱에 의해 시판되었다. 화학-바이오기술 컨버전스(convergence) 신약의 라이선싱 비율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는 신약개발회사는 화학 - 바이오기술 컨버전스 R&D를 통해서만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Amgen, Genentech, Chiron 등 글로벌 대형 바이오기업은 자체 파이프라인에 저분자신약 개발을 확대하는 반면에 Roche, GSK, Pfizer 등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고분자신약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 신약후보물질의 공급 기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결론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의약품시장 진출을 위해 다국가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금난에 시달려 금융권 용자까지 얻어야하고 연구개발자금 확보를 위해서 전 임상 및 임상시험단계에서 해외기술수출을 시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 해 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정부의 지원정책은 신약개발에 필요한 타겟 정보 도출 시에 필요한 기반기술, 기초기술, 원천기술개발과 향후 수십 년 내에도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바이오테크 관련 미래원천기술 개발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이 기대와는 달리 바이오테크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신약으로만 한정되어 지원됨에 따라서 제약산업계의 대다수 신약개발 혁신형 제약기업들로부터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는 저분자화합물 유래 신약개발이 정부의 신약개발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제약업계의 건의에 의해서만 그때그때 지원에 포함될 정도로 현실팍 취급을 받아 왔다.

향후 국가 산업기술지원정책의 목표가 사업화로 직결되는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국내 제약산업이 보유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단·중기적인 개량신약 개발과 저분자화합물신약 개발, 장기적인 바이오신약 개발을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는 신규 신약 타겟에 대한 최초신약(First in class 의약품) 개발과 기존 신약 타겟에 대한 최고 성능의 신약(Best in Class 의약품) 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 선정이 필요하며, 다국적제약기업과의 효율적인 업무제휴는 물론 틈새시장의 공략이 바람직하다.